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innet.or.kr

이메일 buun1@daum.net

• 문서번호	지역언론 기획모니터
•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 목	[지역언론 기획모니터]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보도 분석
• 모니터기간	2023년 3월 27일~12월 6일
• 날 짜	2024년 1월 25일

2030 월드엑스포 유치보도에 저널리즘은 없었다! ‘거리두기 실패’로 검증·감사·질문 없었던 엑스포 보도

1. 들어가며

지난해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2030 월드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119표를 얻어 압승을 거뒀다. 반면 부산은 29표를 획득하는 데 그쳤고,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받았다. 이로써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대장정은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됐다. 투표 당일까지 언론은 정부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의 자료를 근거로 초접전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던 만큼, 투표 결과가 나오자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는 비단 전국언론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언론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었다.

부산시는 2014년 서병수 부산시장 때부터 2030년 엑스포 유치에 적극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엑스포가 서부산지역의 개발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는 것에 주목해 강서구의 맥도 일대를 주무대로 하여 유치를 준비했다. 그러다 2017년도에 사업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었고, 2019년에 들어서서는 강서구 지역이 아닌 동구 범일동 지역에 위치한 북항재개발 2단계 지역에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2019년 5월 부산엑스포는 국가사업으로 확정되고, 2021년 6월 23일 정부가 BIE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며 공식적인 유치 후보국이 됐다.

부산시는 2030 부산엑스포에 맞춰 ‘북항시대’란 비전을 제시했다. 북항 재개발 프로젝트에 엑스포 유치가 확정되면 그 시너지 효과로 도심권 향만 부지를 개조·활용하여 도시재생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덕신공항 개항과 철도망 확장으로 바다, 육지, 항공을 아우르는 물류·교통의 허브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자그마치 43조 원, 부가가치는 18조 원, 50만 명이 고용될 것이라며 부산시는 지역경제활력의 모멘텀으로 삼았다. 이러한 부산시의 계획이 지역상공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언론의 보도를 통해 확산되면서, ‘부산엑스포 유치’가 곧 부산의 미래인 것으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제2의 도시 부산은 저출생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하면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처럼 부산의 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부산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일은 중요한 것일테다. 다만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막대한 세금투입과 시민의 열망이 투영되어 있다면 지역언론은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점검과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엑스포 유치 기간, 지역언론은 외려 정부, 부산시와 보조를 맞추며 ‘조력자’ 역할에 주력을 다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부산민언련은 본격적인 유치 활동이 이뤄진 BIE 실사단 부산 방문 시점부터 유치 결과 발표까지 부산 지역언론의 엑스포 보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유치활동을 복기하는 한편, 유치실패 이후 어떤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지 제시하려 한다.

모니터 기간	2023년 3월 27일~12월 6일
모니터 매체	국제신문, 부산일보 지면기사 KBS부산, 부산MBC, KNN 저녁 메인뉴스
모니터 대상	‘엑스포’와 ‘부산’ 단어가 모두 포함된 부산엑스포와 연관된 기사 신문기사는 사설 포함

2. 부산지역언론 엑스포 유치 보도 양적분석 결과

단순전달 보도 74.6%, 행보 보도 49.3%, 정부·부산시 인용 보도 77.5%
정부와 부산시 행보 단순 전달하며 객관적 검증 없이 전락, 판세 보도 이어가

모니터 기간 부산 지역언론의 엑스포 보도 건수는 총 983건으로, 매체별로는 국제신문 299건, 부산일보 433건, KBS부산 89건, 부산MBC 74건, KNN 88건이었다. 특히 부산MBC와 KNN은 엑스포보도 중 리포트 기사가 각각 67.6%, 82.9%를 차지해 ‘엑스포 유치’ 이슈를 주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신문은 하루 당 평균 1, 2건의 기사를 작성한 셈이며, 지역방송은 사흘에 1, 2번 보도했다. 4월 BIE 실사단 방문, 6월 파리 프리젠테이션 발표, 11월 마지막 프리젠테이션과 투표 등 주요 시기에 보도량이 몰리기는 했지만, 상당히 긴 기간 꾸준히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체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보도건수	299	433	89(46/43)	74(50/24)	88(73/15)	983

△ <표 1> 매체별 보도 건수 *방송(리포트/단신)

엑스포 보도의 전체적인 보도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보도제시수준과 취재원 종류, 보도내용을 분석

했다. 보도제시수준을 알아봄으로써 지역언론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는지, 아니면 해설기사나 비판 기사를 통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취재원 종류는 지역언론이 엑스포 유치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떤 정보원을 통해 보도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그간 국가행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정부와 해당 지자체, 유치위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했다. 엑스포 유치 보도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정량분석을 시도했다. 보도내용 분석은 지역언론이 엑스포 유치 활동 과정에서 어떤 곳에 주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다.

1) 보도제시수준 분석결과

단순전달 보도 74.6%, 비판·대안제시 보도 3.4%

보도제시수준은 엑스포 관련 정보를 전하기만 한 ‘단순전달보도’, 엑스포유치를 위한 전략, 성과, 효과 등을 해설하거나 분석한 ‘해설·분석보도’, 엑스포 유치과정을 점검하거나 비판점을 전한 ‘비판·대안제시보도’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보도제시수준 분석결과, 단순전달보도가 733건(74.6%)으로 전체 보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해설·분석보도가 217건(22.1%), 비판·대안 제시보도는 33건(3.4%)에 불과했다.

보도제시수준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단순전달	225(75.3%)	326(75.3%)	68(76.4%)	54(73%)	60(68%)	733(74.6%)
해설·분석	66(22.1%)	93(21.5%)	15(16.9%)	16(21.6%)	27(30.7%)	217(22.1%)
비판·대안제시	8(2.7%)	14(3.2%)	6(6.7%)	4(5.4%)	1(1.1%)	33(3.4%)
	299	433	89	74	88	983

△ <표 2> 매체별 보도제시 수준, *보도건수(보도비율)

지역신문의 해설·분석보도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사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취재를 통한 해설과 분석을 신기보다, 사설을 통해 정부와 부산시의 유치 전략을 재차 강조는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신문은 해설·분석보도에서 사설 비중이 50%(35건)가 넘는데 ‘마지막까지 원팀으로 최선을 다해야한다’, ‘맨투맨으로 부산의 강점을 알려야한다’ 등의 표현으로 엑스포 유치 전략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엑스포 유치과정에 대한 해설과 분석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뉴스에서 KNN의 해설·분석 기사가 많은 이유는 모니터 기간 엑스포 관련 기획보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모니터 기간 전 엑스포 관련 기획보도를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다.

2) 취재원 분석결과

취재원 부산시가 38.4%, 정부 29.9%로 상위권
전문가 5%, 시민단체 2.1%, 외신 1.9%로 하위권

다음으로 엑스포 관련 보도 취재원을 분석했다. 취재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행정부를 포함하면 ‘정부’, 부산시장, 부산시 관계자 등은 ‘부산시’, 기업과 상공회의소 등은 ‘상공계’, 여당과 야당, 정치인은 ‘정치권’,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공식 유치기구 관련은 ‘유치위’, 범시민유치위와 서포터즈, 국토대장정 홍보단 등은 ‘시민서포터즈’, 부동산·외교·영상 관련 전문가 또는 교수는 ‘전문가’, 시민서포터즈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시민은 ‘시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단체’, 해외 언론을 인용한 경우는 ‘외신’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부산시	113(37.8%)	154(35.6%)	35(39.3%)	29(39.2%)	46(52.3%)	377(38.4%)
정부	100(33.4%)	150(34.6%)	19(21.3%)	11(14.9%)	14(15.9%)	294(29.9%)
상공계	39(13.0%)	92(21.2%)	7(7.9%)	6(8.1%)	10(11.4%)	154(15.7%)
정치권	36(12.0%)	48(11.1%)	12(13.5%)	7(9.5%)	8(9.1%)	111(11.3%)
유치위	26(9.7%)	31(7.2%)	11(12.4%)	8(10.8%)	14(15.9%)	90(9.2%)
시민	21(7.0%)	32(7.4%)	8(9.0%)	7(9.5%)	13(14.8%)	81(8.2%)
시민서포터즈	11(3.7%)	27(6.2%)	10(11.2%)	6(8.1%)	14(15.9%)	68(6.9%)
전문가	4(1.3%)	21(4.8%)	4(4.5%)	5(6.8%)	15(17.0%)	49(5.0%)
시민단체	3(1.0%)	7(1.6%)	9(10.1%)	2(2.7%)	0(0%)	21(2.1%)
외신	6(2.0%)	10(2.3%)	2(2.2%)	1(1.4%)	0(0%)	19(1.9%)

△ <표 3> 매체별 취재원, *중복 집계, **보도건수(보도비율)

엑스포 관련 보도 취재원은 부산시가 377번(38.4%)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정부 294번(29.9%), 상공계 154번(15.7%), 정치권 111번(11.3%), 유치위가 90번(9.2%)으로 1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시민 81번(8.2%), 시민서포터즈 68번(6.6.9%), 전문가 49번(5.0%), 시민단체 21번(2.1%), 외신이 19번(1.9%) 인용됐다. 정부와 부산시, 유치위 인용 보도가 무려 77.5%를 차지해 엑스포 관련 보도 대부분이 정부발 자료에 의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공계는 취재원으로 인용된 건수는 적었지만, 기사의 주요 등장인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나 엑스포 유치성공을 위한 기부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했다. 시민이 취재원으로 인용된 것은 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인터뷰이로 등장한 경우였다. 특히 방송에서는 시민이 인터뷰이로서 화면에 직접 나타나기보다는 유치 응원의 열기를 보여주는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사단 방문, 파리 PT, 유치 결정 투표 등의 보도에서 지역방송은 현장연결을 통해 기자가 직접 현장의 분위기를 알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민 취재원 인용비율이 신문에 비해 적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3) 보도내용 분석결과

**유치 행보 50% 이상 차지, 엑스포 유치활동 검증하는 보도는 2% 불과
전략보도·판세분석보도 검증보다 정부발 보도자료 받아쓰기**

다음은 보도내용 분석결과이다. 보도내용 분석항목은 엑스포 유치전략으로 PT 내용이나 표 획득 전략 등은 '전략', 나라별 표 획득 상황이나 대결 구도 분석은 '판세', 정부와 부산시, 유치위 등의 부산 홍보 활동은 '행보', 서포터즈의 적극적 응원은 '응원활동', 단체나 기업의 유치지원행사 언급은 '행사', 엑스포 유치전략 및 가치실현 등을 점검한 보도내용은 '가치검증', 엑스포 유치에 대한 다양한 효과는 '기대효과', 유치활동과 관련한 평가는 '성과·평가', 유치과정 또는 결과발표 이후 과정은 '과제'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행보	142(47.5%)	210(48.5%)	50(56.2%)	43(58.1%)	48(54.5%)	493(50.2%)
전략	58(19.4%)	133(30.7%)	22(24.7%)	16(21.6%)	29(33.0%)	258(26.2%)
판세	40(13.4%)	47(10.9%)	7(7.9%)	9(12.2%)	11(12.5%)	114(11.6%)
응원활동	31(10.4%)	31(7.2%)	8(9.0%)	12(16.2%)	13(14.8%)	95(9.7%)
행사	23(7.7%)	45(10.4%)	0(0%)	2(2.7%)	2(2.3%)	72(7.3%)
기대효과	4(1.3%)	50(11.5%)	0(0%)	1(1.4%)	8(9.1%)	63(6.4%)
성과·평가	13(4.3%)	18(4.2%)	2(2.2%)	3(4.1%)	4(4.5%)	40(4.1%)
과제	10(3.3%)	14(3.2%)	6(6.7%)	3(4.1%)	4(4.5%)	37(3.8%)
가치검증	1(0.3%)	9(2.1%)	4(4.5%)	4(5.4%)	2(2.3%)	20(2.0%)

△ <표 4> 매체별 보도내용, *중복 집계, **보도건수(보도비율)

보도내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와 부산시, 기업 등 각 유치 활동 주체들의 행보를 전달한 기사가 493건(50.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유치 전략을 알아보는 기사가 258건(26.2%)으로 많았고, 유치 판세와 관련한 기사가 114건(11.6%)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대부분의 보도가 유치 결과 발표 이전에 이루어진 만큼 유치 활동과 관련된 행보, 전략, 판세 등에 지역언론이 주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행보·전략·판세 보도의 취재원을 다시 따져보면 정부, 부산시 유치위가 363건(37%)으로 대다수를 차지해 자체적인 분석은 미흡했다고 분석된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을 고려하면 대통령이나 부산시장 행보에 대해 정부나 부산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재원과 다양한 보도내용을 전했다야 하는데 부재했다는 것을 통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유치 전략을 다룬 기사에서도 정부가 발표하는 전략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정부와 부산시는 이번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 이니셔티브'를 주요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기후위기 등 인류 공동의 문제에 부산이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호를 두고 정작 정부는 기후 문제에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모순된 전략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었다.¹⁾ 그러나 지역언론은 '부산 이니셔티브' 계획을 그대로 전하거나 '훌륭한 유치 전략으로 평가받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²⁾ 유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PT(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도 긍정 반응만 부각했다. 예컨대 각 PT마다 좋은 반응이 있었고 기류가 달라졌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이다.³⁾ 이런 주장의

1) <엑스포 주제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 "정책 절실">(KBS부산, 4/6)

2) <인류 과제 함께 풀자... '부산 이니셔티브'에 실사단 극찬>(국제신문, 3면, 4/10), <9년 전 평범한 유치 계획서→ '부산 이니셔티브'로 전 세계 주목>(부산일보, 5면, 10/10)

근거는 대부분 정부, 유치위 혹은 부산시 관계자에서 나왔다. 이밖에도 정부가 엑스포 참가국 전체에 5억 달러(약 7030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두고도 ‘파격적’, ‘통 큰’ 지원이라고 말했을 뿐, 이런 지원이 실제로 유치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한 점검이나 급작스러운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도 없었다.

판세보도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판세 전망보다 정부의 기대를 전하는 데 그친 것이 많았다. 사우디와 박빙이라는 판세를 내놓으며 1차 투표에서 사우디의 과반을 저지해 2차 투표로 가서 승부를 보겠다는 정부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는 기사가 많았다.⁴⁾ 당시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의견이 외신에서 나왔음에도 정부 발표를 점검하는 것은 없었다. 특히 부산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박빙인 것뿐만 아니라 승기를 잡았다고 예상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엑스포 판세 ‘부산 70, 리야드 70’ 백중세”>(부산일보, 8/17)에서 부산이 70표를 획득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주장을 실기도 했으며, <“확실한 지지표 80표 부산 유치 승산 있다”>(부산일보, 10/09)에서는 ‘확실한 부산 지지표가 80표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또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사우디가 2034년 월드컵을 유치한 결과가 나오자 ‘부산이 엑스포 개최지 결정에서 승기를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거나 부산엑스포 유치에 호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응원활동 보도 95건(9.7%),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지역의 크고 작은 기업 행사 관련 보도 72건(7.3%), 기대효과 보도 63건(6.4%), 성과·평가 보도 40건(4.1%), 과제 보도 37건(3.8%), 가치 검증보도가 20건(2.0%)이었다.

매체별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유독 부산일보가 엑스포 유치로 기대되는 효과를 부각한 보도가 많음을 알 수 있다(50건). 이는 부산의 각 분야 인사들을 인터뷰한 <부산엑스포, 지지합니다> 연재 기사를 통해 부산엑스포의 효과를 설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개월간 30편의 기사가 연재됐으며, 이를 통해 엑스포 유치 기대효과를 검증하기보다는 각계의 주장과 희망사항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 보도, 과제 보도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나타났던 보도내용이다. 엑스포 유치 과정을 평가하고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은 기사인데, 지역언론은 유치 실패에도 부산의 인지도가 올라간 성과가 있다며 부산의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집중했다. 유치 활동에 나서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에 부산을 알렸으며 재계도 이번 유치전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발굴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⁵⁾ 특히 지역신문은 정부와 부산시 주요 인사들의 평가를 그대로 제목에 인용하면서 북항 재개발이나 가덕도 신공항 사업 등 부산의 현안이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문제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유치 실패 이후 정부와 부산시가 재도전을 시사한 점을 그대로 알리기도 했다. 재도전에 앞서 유치 실패에 대한 면밀한

3) <‘국가원조 체계 혁신’ 제안한 PT…“질문 없을 정도로 완벽”>(국제신문, 04/04), <엑스포 유치 4차 PT, 부산이 압도>(부산일보, 6/22), <발표는 부산이 압도, 승부수는 ‘결선투표’>(KNN, 6/22)
 4) <“파리는 부산 물결 이 상승 흐름이라면 최종 승자는 우리”>(국제신문, 11/28), <‘결선투표 대역전극’ 부산, 엑스포 새 역사 쓴다>(부산일보, 11/27), <‘2차 투표’ 역전 승부수…‘중립 17개국’에 달렸다>(KBS부산, 11/27), <관건은 유럽표..대역전 노린다>(부산MBC, 11/28), <부산 엑스포 “초박빙의 승부, 이길 수 있다”>(KNN, 11/22)
 5) <“아쉽지만 부산 브랜드 가치 높여” 마음 다잡는 지역 상공계>(국제신문, 12/1), <유치 실패했지만…182개국 발품 판 덕에 뜻밖의 수확도>(부산일보, 11/30), <엑스포 유치 ‘과정’이 남긴 것은?…“부산 인지도 상승”>(KBS부산, 11/30), <엑스포 아쉬운 패배, “실패는 아니다, 다시 달리지자”>(KNN, 11/29)

분석이 필요하지만, 언론은 이에 대한 비판 없이 정부와 부산시의 재도전 의사를 전하기만 했다.⁶⁾

3. 부산지역언론 엑스포 유치 보도 특징

1) 엑스포 유치 주요 이슈별 보도경향

행보 중계보도 많아, 보도량에 비해 의미 있는 보도는 부족
윤석열 대통령, 박형준 시장 1년 평가에 '엑스포 유치활동' 긍정적 성과로 꼽기도

엑스포 유치 활동 기간 중 BIE 실사단 부산 방문이나 투표를 앞두고 유치전략을 BIE 회원국에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 발표, 최종 유치 투표 등 중요 이슈들이 있었다. 지역언론이 엑스포 관련 보도 중 가장 많은 보도를 쏟아내었던 BIE 실사단 맞이 준비, BIE 실사단 부산 방문, 4차 파리 프리젠테이션, 최종 투표와 관련된 보도경향을 살펴보았다.

엑스포 유치 주요 이슈	보도기간	보도건수		특징
BIE 실사단 맞이 준비	3/27~4/2	국제신문	17건	-부산시 발표 내용 전달에 치중 -부산시 전략 평가와 점검에는 소극적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
		부산일보	23건	
		KBS부산	12건	
		부산MBC	10건	
		KNN	12건	
BIE 실사단 부산 방문	4/3~4/9	국제신문	58건	-실사단 일정 시시콜콜 중계 -과도한 시민 통제, 교통난 문제 지적 소홀 -대통령 행보 주목
		부산일보	51건	
		KBS부산	19건	
		부산MBC	15건	
		KNN	15건	
BIE 4차 PT	6/19~6/25	국제신문	19건	-정부와 부산시의 긍정적인 평가에 주목 -대통령 행사장 지각 논란 다룬 기사는 없어 -부산시민의 유치 열기를 조명, 특히 지역방송은 현장 연결로 응원전 분위기를 전달
		부산일보	22건	
		KBS부산	4건	
		부산MBC	4건	
		KNN	9건	
최종 투표	11/27~12/3	국제신문	41건	-정부와 부산시 등 관계자 인용 치중, -정부 표 분석 근거로 '박빙' 내세워 기대감 키워 -참패 평가는 없고 성과만 부각 -윤석열 대통령·박형준 시장·재계 부각, 시민은 응원 열기 대상화
		부산일보	44건	
		KBS부산	13건	
		부산MBC	16건	
		KNN	12건	

△ <표 5> 엑스포 유치 주요 이슈별 보도경향

대부분의 보도가 정부와 부산시의 발표를 그대로 중계하는 것에 집중되어 보도량에 비해 유치활동

6) 부산민언련 [지역언론 훑어보기] 11월 5주_2030엑스포 유치 실패...지역언론은?

행보 이외에 새로운 정보는 얻기 어려웠다.

BIE 실사단 부산방문을 앞두고 지역언론은 73건의 보도를 내보내며, 실사단 방문 일정과 행사 내용, 시민협조를 당부하는 부산시 보도자료를 전달했다. 부산시가 준비한 내용에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2030엑스포 부산의 주제가 잘 녹여져 있는지 점검하는 보도는 찾기 힘들었고, 실사단에게 유치 열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지역방송은 이 기간에 2025년 월드엑스포 개최지인 오사카를 방문하여 일본의 성공적인 엑스포 유치의 비결과 부산의 전략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선보이기도 했다.⁷⁾

BIE 실사단 방문 시기, 지역언론은 총 158건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신문은 하루 평균 10건, 방송은 2~3건 보도해 실사단 방문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역시 보도 대부분은 실사단 방문일정을 정리해 알려주거나 실사단의 동정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 일부 기사는 실사단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술을 마실지에 관심을 가지는 등 시시콜콜한 정보까지 전달하기도 했다. 실사단 방문행사로 빚어진 시민 불편이나 부산의 유치 계획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대해선 소홀했다. 또 엑스포 유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며 대통령의 행보를 주목하기도 했다.

6월 20일 제172차 BIE 총회에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지역언론은 많은 보도를 내놨다. 주로 정부와 부산시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며 4차 PT가 엑스포 유치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K-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우고 유명 연사들의 PT가 이어질 것이라며 PT 계획을 알렸다. 그리고 PT가 끝난 22일에는 부산이 이번 총회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경쟁국의 PT에 대한 평가나 현지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는 보도는 없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열쇠고리나 목발 짚은 최태원 회장의 사연 등 다소 가십적인 정보에 주목하는 한편, 부산시민의 유치 열기를 조명하며 특히 지역방송은 현장 연결을 통해 거리 응원전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 발표순서에 대통령이 늦게 나타나 대통령의 PT 지각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역언론에서는 부산일보만 지면이 아닌 온라인 기사 한 건을 내보냈다.⁸⁾

4월 BIE 실사단 방문과 6월 파리 4차 PT가 있었던 시기에 지역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논란으로 시민과 수산업계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지역언론의 보도는 엑스포 유치를 더 주요하게 다루었고, 시민 안전 등 지역현안을 의제화하는 데는 소홀한 경향을 보였다.

엑스포 유치 결정 마지막 주, 지역언론의 관련 보도건수는 총 141건이었다. 엑스포 유치 투표일 직전, 지역언론 대부분 엑스포 유치에 긍정적 전망을 쏟아냈다.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지지표를 분석한 기사는 없었고 정부와 유치위, 부산시가 내놓은 발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며 '치열', '접전', '역전' 등의 표현으로 기대감을 부풀렸다. 외신 중에는 사우디 지지가 120표 이상 예상된다는 보도도 있

7) <'더 나은 미래' 부산다운 상징성 보여준다>(KBS부산, 3/30), <2번째 오사카 엑스포, 시민에게 어떤 의미?>(부산 MBC, 3/27), <2025 오사카 엑스포 유치 비결은? "세계와 함께">(부산MBC, 3/28), <약점을 강점으로, 오사카 넘어라>(KNN, 3/28), <부산만의 차별화가 유치 열쇠>(KNN, 3/29), <엑스포 실사단, 절실함으로 사로잡아라>(KNN, 3/30)

8) <대통령실 "尹 '부산엑스포 PT 지각' 사실 아냐...일찍 도착">(부산일보, 6/21, 온라인기사)

었지만 지역언론은 이를 전하지 않았다.

엑스포 유치 실패가 확정된 이후에는 유치활동에 인사들의 활약에 주목하며,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정부와 박형준 시장의 재도전 시사 발언을 부각하기도 했다.

한편, 지역언론은 윤석열 정부 1년과 박형준 시장 1년을 평가하며 ‘엑스포 유치 활동’을 긍정적 부분으로 언급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각각 <엑스포·신공항은 속도…침례병원·먹는 물은 답보>(5/9, 1면), <북항 재개발·가덕신공항 기반 닦고 앞장서 엑스포 띄웠다>(5/9, 2면)에서 엑스포 유치와 산업은행 이전, 경부선 지하화 같은 공약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산 주요 공약들이 상당히 진척됐다고 평가했다. 부산MBC와 KNN 역시 <윤 대통령 1년, 부산 공약 성과와 과제는?>(부산MBC, 5/9)과 <‘윤 정부 1년’ 지역 공약 성적표는?>(KNN, 5/9)에서 엑스포 유치 지원과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을 이번 정부의 성과로 꼽기도 했다.

박형준 시장 1년에 대해서도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건설 등에서 성과를 냈고, 이를 통해 글로벌 허브 도시 추진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고 엑스포 유치활동을 긍정적 성과로 평가했다.⁹⁾ 지역언론이 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 점검 없이 박형준 시장의 핵심공약 이행률만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시민단체의 평가를 인용하며 엑스포 추진으로 시민 안전·민생 관련 정책이 소홀했다는 지적은 전했다.¹⁰⁾

엑스포 유치 관련 특정 이슈 이외의 기간에도 꾸준히 엑스포 관련 보도는 있었다. 대부분 지역기업의 기부 소식이나 박형준 시장의 유치 행보를 전하는 소식이었다.

2) 되돌아봐야할 보도 경향

정부나 재계 인사 행보 ‘과대 포장’

시민참여 강조했지만 보도에서는 ‘응원열기 배경’으로만

정부와 부산시의 발표 자료에 의존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정부나 재계 인사의 유치 활동을 포장하는 양상도 발견됐다. 먼저 정부 행보 보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외교 강행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제신문은 <尹, 40여 개국 목표로 릴레이회담…俞여사 ‘포차 외교’로 부산 세일즈>(2면, 9/21)에서 윤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위한 강행군을 이어갔다고 총 40개국 이상의 정상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일보도 <닷새간 39개국 정상 만난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전 진기록>(9/22)에서 닷새간의 방미 기간에 총 39개국 정상과 마주 앉았다고, 불과 한 달 만에 60개국을 채우는 ‘진기록’을 달성했다는 대통령실의 발언을 그대로 알렸다. 이런 보도 양상은 ‘한 총리 칠 틈 없는 부산세일즈’, ‘지구 6바퀴 돈’과 같이 한덕수 총리나 박형준 부산시장 행보 보

9) <“엑스포 유치 성공해 시민께 보답 … 여성·노동정책도 온 힘”>(국제신문, 6/30, 6면), <‘엑스포 유치전’ 부산에 활기 … 복지 정책 미흡>(부산일보, 6/30, 1면) 등

10) <민선 8기 1년 부산시장…시민사회 평가는?>(KBS부산, 6/28), <공약 추진률 96%?... “엑스포에 민생 매몰”>(부산MBC, 6/28, 뉴스투데이)

도에서도 발견됐다.¹¹⁾ 이들의 유치 활동이 실효성 있는 행보인지 점검은 없었고, 지나치게 미화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지역방송도 지역신문만큼 정부 행보를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총력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정부나 부산시의 행보를 짧게 전달하는 기사는 여럿 있었다.¹²⁾

한편, 지역신문에서는 재계 인사를 부각하는 보도도 있었는데, 엑스포 홍보와 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유치위원장이었던 SK 최태원 회장이 다리 부상을 입은 것을 두고 ‘목발 투혼’이라며 그의 노력을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유치 행보를 주목하기도 했다. 부산일보는 <“부산은 더 뜨겁다” 김건희, ‘감성’ 홍보로 엑스포 유치전>(2면, 6/22)에서 윤 대통령과 다른 동선으로 유치전에 가세해 감성에 호소하는 홍보로 유치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가 새겨진 김 여사의 가방 열쇠고리를 알리기도 했다. 국제신문도 <尹, 40여 개국 목표로 릴레이회담…俞여사 ‘포차 외교’로 부산 세일즈>(2면, 9/21)에서 대통령 방미 기간에 김 여사가 한 행사를 찾아 외신기자를 만나 한국 포장마차 음식을 먹고 부산엑스포를 홍보한 것과 관련해 ‘포차 외교’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치 활동 참여를 강조하려다 시민을 대상화하는 경향도 보였다. 부산일보는 <대통령도 시민도 이번 주는 엑스포 세일즈맨>(4/4)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엑스포 유치를 위해 시민도 함께 참여해줘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으며, <유치 활동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성숙한 시민 의식’>(4/4)에서는 “유치 활동의 마지막은 시민이 완성한다”는 부산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시민 노력을 강조했다. 부산MBC도 <100만 인파 ‘엑스포 워크’ 시민들 손에 달렸다>(3/30)를 통해 유치전에서 시민의 노력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전했고, KBS부산과 KNN도 시민 동참을 호소하거나 알리는 기사를 썼다. 국제신문은 <환영식 앞장 다문화가정 청년 ‘포용의 도시’ 알린 일등공신>(4/6)에서 실사단 방문 당시 환영행사 곳곳에 다문화 가정 청년이 배치됐다고 하며 이는 부산의 포용성을 알리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을 다소 대상화하는 측면이 있는 보도였다.

특정 기업 홍보성 기사도 보여

실효성 점검 없이 엑스포 유치와 연결해 부산시 추진 사업 알려

유치전과는 상관없는 특정 기업을 홍보하는 양상도 발견됐다. 국제신문은 <엑스포 염원 담은 특별 제작 주류 ‘대선 골드’ 나왔다>(4/4)를 통해 대선주조가 엑스포 실사단 방문에 맞춰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다며 대선주조의 상품을 소개했다. 엑스포 유치 응원의 일환이라고는 하나, 홍보성이 짙은 기사였다. 부산일보도 <30년 기다림으로 빛은 매실주, 부산에 취하게 하라>(6/20)를 통해 대선주조의 술을 알렸다. 지역신문은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유로 자사 행사를 홍보하기도 했다. 국제신문은 <부산도 ‘엑스포 키즈’ 키운다>(2면, 4/4)에서 부산시교육청과 연계한 ‘부산엑스포 키즈교육’ 사업 소식을 주요면을 할애해 전했고, 부산일보도 <2030 엑스포 유치로 놀라운 부산의 미래 ‘성큼’>(1면, 11/07)을 통해 자사가 공동주최한 ‘2023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 소식을 알렸다.

11) <SNS 올리랴, 행사장 찾으랴 韓총리 설 틈 없는 부산세일즈>(국제신문, 11/8), <“엑스포 부산 일념으로” 지구 6 바퀴 돈 박형준 시장>(부산일보, 11/24),

12) <부산시, 아프리카서 엑스포 유치 홍보 총력전>(KBS부산, 10/9), <D-2, 막판 유치전 뜨겁다>(부산MBC, 11/26), <윤 대통령 파리행, 엑스포 유치 '총력전'>(KNN, 6/13)

한편,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부산시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을 알리는 문제도 있었다. <2030년 이기대 풍피두 분관 추진 부산엑스포와 시너지 효과 노린다>(국제신문, 10/17)와 <엑스포 부산 랜드마크... 케이블카 연결 '황령산 전망대' 2026년 준공>(부산일보, 10/10) 등이 그 예다. 풍피두센터 분관이 부산에 유치했을 때 부산엑스포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황령산 전망대 역시 환경훼손 우려가 제기되는 사업임에도 건설이 완료될 시 엑스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엑스포와 실제 어떠한 연계효과를 낼지에 대한 분석 없이 각 지자체가 내놓는 기대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다.

3) 주목할 만한 보도

경찰 과잉대응, 엑스포 가치 실현 정책 점검 등 짚어

실사단 방문 당시 경찰의 과잉 대응을 지적한 기사나 엑스포 주제와 모순된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 기사 등 단순히 정부와 부산시의 자료를 '받아쓰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증 보도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투표가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점검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국제신문은 <엑스포 실사때 집회 막은 경찰 정당 업무? 호들갑? 갑론을박>(4/5)을 통해 실사단 방문 당일 집회가 통제된 것과 관련해 비판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실사단 방문 당시 대부분 언론이 실사단 일정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유치 응원전을 알리는 데 집중했던 것과 달리 실사단 방문과 관련한 부산시의 과잉 통제를 지적한 기사로 눈에 띄었다. KBS부산은 <엑스포 주제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정책 절실”>(4/6)에서 기후문제 해결을 강조한 부산엑스포 구호와 맞는 정부의 실질적인 기후위기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한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주목했다. 엑스포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소개한 점에서 주목됐다. 또한 <2030 엑스포 부산 지지?...이웃 열강 '침묵'>(KBS부산, 9/6)과 <우리는 지지했는데..일본은 '침묵'>(부산MBC, 9/10)은 미국과 중국, 일본이 여전히 부산엑스포 지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 정부 엑스포 외교의 실상을 밝혔다. 부산MBC는 <부산엑스포 유치 '올인', 시민 기대는 '글썸'>(7/7)에서 엑스포 유치에 전력을 다하는 부산시와 달리 시민들의 기대감이 적다는 점에 주목했다. 엑스포 유치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만 부각된 다른 기사들과 달리 엑스포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관점을 소개했다.

4. 나가며

엑스포 유치 기간 지역언론은 '검증 없는 받아쓰기' 보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단적으로 투표 결과 발표 전 언론이 사우디와 부산이 초접전이라고 보도한 것이 있겠다. 정부발 판세분석에만 의존하다 보니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탓에 결과적으로 오보를 범하게 됐다. 사실 유치전에서 부산은 사우디에 절대적인 열세로 평가받았다. 외신의 주목도 사우디에 쏠려 있었다.¹³⁾ 그럼에도 지역언론은 사우디와 박빙이며 2차 투표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정부의 기대를 전하기만 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엑스포 주제와 상반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이

13) <난개발과 강남스타일에 넘어진 부산 엑스포>(시사IN, 23/12/18)

나, 동일한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끼리 연대하겠다는 정부의 '가치 외교'가 엑스포 유치전에서는 불리하다는 우려 등이 있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기사는 부재했다. 또 부산시가 엑스포 슬로건에 맞는 전략과 PT 발표를 하고 있는지 시민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는 미미했다. 엑스포 투표가 진행되는 현지에서 부산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졌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여러 정상과 만나 외교 진기록을 썼다거나 SK 최태원 회장의 '목발 투혼', 김건희 여사의 열쇠고리에 주목하는 등 실제 유치 성과와는 상관없는 가십적인 이슈에 주목했다. 이는 소극적으로 받아쓰는 것을 넘어 정부와 유치위의 행보를 '적극 부각'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엑스포 보도를 점검하며 대형 국가이벤트를 유치함에 있어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역언론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부산시와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외국 투자 유치 가능성 등 여러 기대효과를 내걸고 엑스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위에 지역 상공계와 정치권, 언론까지 나섰다. 대형 국가행사를 유치하고 운영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유치 이전에 행사로 발생하게 될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할 것이다. 또한 유치 과정에서도 효과적인 전략과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판세는 어떠한지 등 정확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우선 정부와 부산시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지는 하지만, 언론에게도 적극 요구되는 역할이다.

하지만 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 지역언론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엑스포 유치라는 당위에 힘을 실는 것 외에, 엑스포 유치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에는 소홀했다. 유치 실패 후에도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평하며, 실패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결여됐다. 막대한 세금과 인력이 투입되었고, 잘못된 예측이 기대감을 불러온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끝>